구복규 現군수 재선가도…대항마 관심 집중

내년 지방선거 누가뛰나

〈2〉화순군수

실생활 밀착형 정책 '현역 프리미엄'

전·현직 도의원 등 후보군 3명 도전

문행주·윤영민·임지락 등 출마 물망

화순군수 선거는 현 군수를 비롯해 자천·타천 4명의 후보들이 일찌감치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화순군수 후보로는 현직인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문행주 더민주혁신회의 화순상임대표, 윤영민 지역경제연구소 소장, 임지락 전남도의원(가나다 순) 등 4명이다.

화순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구 군수에 대항할 상대가 누가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먼저 구복규 군수는 1974년 화순군 지방공무원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사평면장, 문화관광과장, 화순읍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제9·11대 전남도의원과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구 군수는 2014년 처음 화순군수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화순군정을 이끌고 있다.

민선 8기 동안 '만원 임대주택', '24시간 어린이집', '화순적벽 개방', '화순관광 310만 유치' 등 실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하며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농민 운동가 출신인 문행주 더민주혁신회의 화순상임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화순군수 후보 민주당 경선에 나서며 주목받았다. 절치부심 끝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구 군수와 리턴매치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대 중문과를 졸업한 문 상임대표는 화순군의회(5·6대), 전남도의회(10·11대)에서 오랜 의정 경험을 쌓았다.

특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이재명 대선후보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 전남본부장 등 당내 주요 직책을 맡으며 정책 기획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문행주 상임대표는 "지방정치 16년의 경험과 농민운동을 통해 축적한 현장감 있는 감각을 바탕으로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지역 비전을 설계하겠다"며 "군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독단적인 행정보다는 소통과 협치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윤영민 지역경제연구소 소장도 화순군수 출마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전남도 민관산학교육협력 위원 활동 등을 통해 실무·이론을 겸비한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화순 출신인 윤 소장은 화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토박이다. 전남대 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후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7·8대 화순군의원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윤영민 소장은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소멸과 민생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면 광주·화순·인근 지역 간 연계 관광 및 교육 협치 강화, 산업 여건 개선이 핵심"이라며 "군의원 활동과 연구소 운영을 통해 현장과 정책을 모두 경험한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지역 문제를 풀어낼 준비된 후보로서 지속적으로 해법을 고민해 왔다"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지락 전남도의원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과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하고 화순군의회 5·6대 의원, 화순군 정책보좌관을 거쳐 현재 제12대 전남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백신산업특구 발전 방향 제시,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조례, 광역철도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정책 실천력을 인정받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화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화순 발전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며 "정책 개발과 예산, 광역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현진·화순=이병철 기자

관광진흥법 개정 토론회 지속가능관광 확산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토론회가 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려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와 민형배·김재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동구 제공〉

외국인 유학생·숙련인력 전남 정착 수월해진다

道 건의 '지역특화비자 소득 완화' 반영

소득요건 3천496만원→2천992만원 하향

전남도가 건의해온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를 법무부가 수용함에 따라 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인력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특화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천496만원(1인당 국민총생산 70%)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소득 2천992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전남도가 지속 건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이달 2일부터 적용됐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5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돼 지역 정착에 유리하다.

특히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 비자로서 외국인과 기업 모두 선호하지만 그동안 높은 소득 기준 때문에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대비 연 500만원가량 낮은 소득으로도 비자 취득이 가능해져 기업과 외국인 모두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전남 10개 군에서 지역특화비자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요건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연화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계해 정착형 인재로 육성하고 외국인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착 유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맨홀 2천516곳 추락방지시설 설치

광주시는 7일 "하천변과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 우려 구역을 중심으로 맨홀 2천516개소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맨홀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열려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개정해 재해취약지역 맨홀에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광주지역 맨홀은 총 10만2천284개소다. 이 가운데 인명 사고 위험이 높은 하천변, 상습침수지역, 저지대 등을 대상으로 우선 2천516개소를 선정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1천55개소(41.9%)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했고, 자치구와 협력해 오는 9월까지 779개소(30.9%)를 추가 설치한다. 나머지 682개소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우기 전까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수희 기자

어등대교·극락교 20일까지 부분 통제

오후 8시-오전 6시 신축이음장치 교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7일 "8일부터 20일까지 '신축이음장치 교체 야간공사'가 진행되는 어등대교(무진로→시청 방향)와 극락교(상무대로→시청 방향)에 대해 부분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교량의 구조 안정성과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중차량 통행에 따른 반복 하중으로 신축이음장치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소음·진동과 구조물 손상 등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어등대교는 기아자동차 공장과 평동산단을 오가는 중차량이 집중되는 노선이다. 극락교는 상무지구와 송정권역을 잇는 도심 외곽 순환도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다.

특히 어등대교는 지난해 11월 신축이음 일부가 파손돼 긴급 보수가 이뤄졌던 구간으로 이번 공사는 해당 지점의 구조 보완을 중심으로 한 후속 정비다.

종합건설본부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 공정을 야간 시간대(오후 8시-오전 6시)에 집중 시행한다.

어등대교는 오는 8일부터 15일까지(8일간), 극락교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13일간) 구간별로 순차 시공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과 시간 동안 탄력적으로 차량 통제를 실시한다.

어등대교는 편도 5차로 중 1차로씩 순차 통제하고 극락교는 편도 5차로 중 4·5차로를 통제해 1-3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공사 일정과 우회 정보는 가변정보표지판(VMS)을 통해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기수희 기자